



Read the full book on: [10.1787/migr\\_outlook-2017-en](http://10.1787/migr_outlook-2017-en)

## 2017 년 국제이주 전망

한국어 개요

### 주요 추이

2016 년 예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OECD 지역의 영구이주 유출입이 3 년 동안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 년에 약 5 백만명이 OECD 국가로 영구 이주했으며, 이는 경제위기 이전의 최고 수준인 2007 년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

인도주의적 이주는 2015/2016 년도의 이러한 수치 상승에 있어서 주요 동인이었으며, 2015 년 1 월에서 2016 년 12 월 사이의 이주민 150 만명이 인도주의적 이주에 해당된다. 2015 년에 유럽연합 내의 가족재결합 이주와 자유이동(free movement migration: 조약 등에 의해 조약 당사국간 또는 회원국간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EU 조약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역자 주)에 의한 이주는 OECD 에 유입되는 전체 영구이주에서 각각 1/3 을 차지했다. 2015 년도 이주민의 주요 출신국가 중 상위 다섯 곳은 중국, 시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인도였다.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새로운 이주민의 29%는 다른 OECD 국가 출신이다.

임시이주도 역시 증가했다. 2015 년도 국가간 기업내 이동(international intra-firm mobility)은 10% 이상, 유럽연합 내부에서 파견근무는 3% 증가했다. 계절노동자 국제채용은 많은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폴란드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2016 년에 OECD 국가에 새롭게 등록된 망명신청자는, 2015 년과 비슷한, 160 만명 이상이었다. 이러한 망명신청자 중에 거의 3/4 은 OECD 유럽국가에 등록되었다. OECD 지역에 등록된 망명신청자 중에 시리아 출신이 20% 이상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출신은 13%를 차지했다. 독일에는 2016 년에 720,000 건의 공식적 망명신청이 등록되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비율(0.9%)의 망명신청을 받은 국가이다.

망명신청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의 증가에 부응하여, 많은 OECD 국가들은 망명신청자 정착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하지만, 1951 년 UNHCR 협정 바깥의 보호지위를 가진 망명신청자들에 제시되는 조건은 몇몇의 국가에서는 비우호적으로 되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더욱 엄격한 국경통제와 강화된 입국과 체류의 확인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OECD 국가는 고속련 노동자, 기업가, 투자자에 다양한 입국 경로와 개선된 체류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재검토 및 향상시키고 있다.

2016 년 OECD 이주민 인구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67.4%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외국태생 인구의 실업률은 자국태생의 실업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럽에서 더욱 그러하다.

근년 동안의 난민 위기가 반영되어 최근 도착한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반응을 설계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이주민에게 맞춤형 조치들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교육/훈련시키는 등 다양한 통합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주민 도착 시 직업역량 평가, 프로그램 기간의 단축을 포함한 이주민 통합 과정의 가속화 등과 같은 관계당국의 조기개입이 강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적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 가족이주

가족이주에는 4 가지의 하위범주(가족형성, 동반가족, 가족재결합, 국제입양)로 구성되며, 최근 몇년 동안 OECD 지역으로 유입되는 영구이민의 주된 통로가 되었다.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이주민 성인은 정착국가의 노동시장에 느리게 통합된다.

가족이주민에는 신생아에서 중장년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연령 및 각기 다른 직업역량과 출신국가의 이주민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가족이주가 다른 경로의 이주민과 구별시킨다. 가족이주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크게 다양한 각종 가족이주 규칙/규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복합적 사안이다.

가족이주 관련 권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확대되어 온 반면에 가족이주민에게 부여되는 자격요건 및 거주허가는 강화되었다. 가족이주의 관리는 개별적 우선순위와 정책목표의 충돌을 조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가족이주는 관리되어야 하지만, 일련의 제약적 요소는 이러한 관리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의 가족이주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핵심적 당면과제가 있다. 여기에는 1) 가족이주 유입수준의 예측향상, 2)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표 노동이주민에게 매력성을 유지와 가족이주민에 대한 허용규정에 대한 균형 유지, 3) 가족이주민을 정착국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자격조건을 활용하는 방식 4) 미등반된 미성년자의 가족재결합 권리의 처리 방식이 포함된다.

## 핵심 내용

### 2007년 이후 최고로 증가한 국제이주

- 2015년에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이주는 470 만건(2014년과 비교하여 +7%)이었으며, 예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총 500 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016년에는 OECD 국가에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160 만건 이상의 망명신청이 등록되었다. 이러한 두 해 동안에 약 150 만명에게 망명신청에 따른 국제적 보호가 부여되었다.
- 2015년에 OECD 지역에서 고등교육(대학/대학원) 학생에게 부여된 학생거주허가는 150 만건 이상이었다.
- OECD의 외국태생 인구는 2015년에 1억 2천 4백만명을 기록했다.

###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 OECD 이주민의 3명 중 2명 이상이 고용된 상태이다. 2016년에 외국태생 노동자의 전체평균 실업률은 8.3%에 이르렀으며, OECD 유럽국가에서는 12.4%였다. 이는 자국태생 노동자에 비교하면 각각 1.8% 및 4.8% 높은 수치이다.
- 이주민은 단순 작업에 관련된 일자리에 과도하게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화가 진행되는 경우 실업 리스크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유럽국가에서 외국태생 노동자의 47%는 일차적으로 단순 작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 가족이주

- 2015년 OECD 지역에서 160 만명 이상의 가족이주민이 거주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총 영구이주 유입민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 경제이주의 범주와 비교하면 가족재결합에는 지연이 따르게 되며, 또한 자격조건, 처리시간, 다른 이주 경로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은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 가족형성은 가족이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하위범주이다. 많은 OECD 국가에서 10% 이상의 혼인은 자국시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이주민 성인은 정착국가의 노동시장에 느리게 통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가족이주민 성인은 평균적 고용률 수준은 체류 20년이 지난 후에만 다른 이주범주의 성인 및 자국태생과 비슷해진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이주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요건 또는 주택요건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자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덜 일반적이다. 언어요건 및 통합요건도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요건들이 고용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doi: 10.1787/migr\_outlook-2017-en